

# 통일이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시안

이 미 경  
(통일교육원)



# 통일이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시안

이 미 경 (통일교육원)

## 목 차

I. 서론	IV. 통일이후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개발시안
II. 독일의 정치교육: 실태 및 시사점	V. 결론: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III. 북한주민의 특성 및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	

## 국문요약

이 연구는 통일이후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초기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통일관련 민주시민교육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통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고자 했다. 통일이후 북한주민 대상 민주시민교육은 북한주민의 통일한국사회의 동화와 남북한 주민의 내적통합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행해져야 한다.

북한주민이 통일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 적응과 부적응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칠 것이므로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과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통일직후 북한주민이 통일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동화되기 이전 과도기 단계에서 초기 적응의 시행착오과정을 거쳐 안정단계에 접어

드는 세부단계를 구분하여 그에 요구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독일의 정치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사례 등을 볼 때 새로운 환경에 동화되어 내적통합을 달성하는데 있어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런 점에서 통일직후 북한주민교육에는 통일한국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함양만이 아닌 자립자활의 능력배양과 심리 및 정서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통일이후 사회통합달성에는 북한주민 대상의 교육만이 아닌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와 공존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 등이 남북한주민 모두에게 필요하므로 통일에 앞서 남북한 주민 상호이해 교육을 비롯한 민주시민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 주제어: 민주시민교육, 북한주민, 독일정치교육, 북한이탈주민정착사례, 사회통합

## I. 서론

이 연구는 통일이후 민주시민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통일과 관련된 민주시민교육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주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통일이후 북한주민들은 이전까지 익숙했던 전반적인 삶의 양식과 다른 생활의 방식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통일완성을 위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이 실제 어떤 계기와 방식 및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으나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남북한 주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 번영이 보장되는 민주평화복지국가 실현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과정과 직후, 이전의 생활과 완전 단절과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대상은 북한주민일 것이다. 따라서 통일과정과 이후 북한주민 대상의 교육은 통일이후 살아갈 새로운 환경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함양 즉 민주시민교육 등이 주 내용을 이뤄야 한다.

한편 통일직후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단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통일이 달성되기까지의 진행과정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시기별 환경변화와 함께 그에 따라 적용 시 요구되는 사안 등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 단계에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3단계 즉 남북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 국가단계 등의 단계 이행을 고려할 수 있지만 북한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마련 차원에서는 이 단계 이행을 따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남북한이 제도 통일을 합의한 이후의 단계 즉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단계에 의하면 남북한이 제도통합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남북연합단계과정 혹은 그 이후 정치적 통일 단계에 들어서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후 북한주민 대상 민주시민교육은 정부의 통일방안의 단계별 이행경로와 별도로 남북한이 영토와 제도 통합을 합의한 후 분야별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즉 남북한이 각 분야 별 통합방안을 마련·운영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통일이후 북한주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은 통일국가형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구성원으로서 북한주민이 통합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고려하여 이를 근거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통일이후 북한주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통합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단계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사회의 정착사례와 함께 기 통일된 국가의 통합선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통일에 앞서 남한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사례 등은 통일이후 북한주민이 경험하게 될 것들로 이에 대한 정보와 함께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주요 자산이라 할 수 있다.

통상 체제전환에 이어 새로운 체제에 통합되기까지 소요시간은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장기적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국가 가운데 통일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간주되는 독일의 경우도 통일이후 27년이 된 현재까지 사회통합의 과정은 진행 중이라는 평가를 고려할 때 완전한 통합을 염두에 둔 채 단계별 이행정도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독일을 비롯한 체제통합을 이룬 국가들의 선례와 통일이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의 적응사례 등을 고려할

때 대략 통일과체제전환 등의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과도기와 그를 벗어나 적응해 가는 적응기 그리고 이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안정기로 구분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이 연구는 통일직후 북한주민이 대체로 과도기, 적응기, 안정기의 단계를 거쳐 통일이후의 체제와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상정하고 특히 통일초기 과도기의 단계를 세분하여 각 단계별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통일직후 과도기 단계에 주목하는 것은 통일이후 북한지역과 주민의 안정화의 여부가 통일이후 사회통합에 중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 북한주민의 통일한국 사회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위해서는 독일의 정치교육 사례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사례 등의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우선 독일의 통일과정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해 어떤 교육이 행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성과를 중심으로 통일직후 북한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어떤 시사점을 줄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통일에 앞서 남한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사례를 통해 북한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기까지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통일직후 북한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 II. 독일의 정치교육: 실태 및 시사점

### 1. 독일 정치교육의 실태

독일의 정치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 민주주의를 정착하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통일 후 사회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받고 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정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독일의 정치교육은 2차 대전 직후 연합국들이 나치즘의 정치체제의 기반을 해체하고 민주주의제도를 이식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독일에서의 정치교육은 국가와 정당이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주도했다. 독일연방정부 내무성 산하에 연방정치교육원과 주정부 산하 16곳의 주 정치교육원을 설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여러 정당 및 정당재단에서 정치교육이 실시되었다.<sup>1)</sup> 독일 정치교육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연방정치교육원은 전 독일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정치교육을 하고 있는 다른 교육단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2)</sup> 연방정치교육원은 일종의 정부기관으로서 연방 내무부의 관할 속에 있지만 책임자는 각 정당에서 임명된 3명으로 구성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정당에서 파견된 교육 책임자만이 아닌 여러

1) 독일의 정당법은 정당의 정치교육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정당산하에 국민정치교육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회민주당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기독교민주당의 콘라트 아데나워재단, 기독교사회당의 한스 자이텔재단, 자유민주당의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등이 있다.

2) 독일의 정치교육은 연방주의에 입각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통해 이뤄졌다. 특히 정치교육수행기관을 다양화하여 민간, 사회단체들을 정치교육에 참여시키고 연방정부는 교육방법론, 교재개발, 정보제공 등의 업무에 치중하면서 민간 사회단체의 정치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황병덕, 『독일의 정치교육』 민족통일연구원, 1995.12, pp.60-63.

정당 소속의 연방하원의원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자문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sup>3)</sup>

이와 같이 초당파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치교육이 시행되기 위해 독일 정치교육에서 중시되는 원칙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가지 원칙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당시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 등 정치세력들이 난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교육의 이념적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1976년 11월 보이텔스바흐의 한 호텔에서 ‘정치교육에 있어서 합의문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공통된 논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이텔스바흐 합의’로 불리는 세 원칙으로 정식화되었다. 강압적인 교화 교육과 주입식의 교육을 금지한다는 ‘강제성의 금지’ 그리고 논쟁적인 문제는 논쟁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논쟁성의 유지’ 그리고 학생들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교육대상자 지향성’의 원칙이다.<sup>4)</sup>

이상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가지 원칙은 정치교육을 하는 독일의 모든 공공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으로 자리하고 있다. 전후 독일의 민주주의제도가 정착되고 정치적 발전을 이루게 된 배경에는 이 같이 합의된 원칙이래 정치교육이 행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독일에서 민주시민의 육성과 민주적인 정치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정치교육은 연방정치교육원과 주 정치교육원을 비롯한 학교와 시민대학 등 공교육 외에도 교회와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차원과 정당과 정당재단 등의 정치단체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실시된 독일의 정치교육은 통일이후에는 동서독간의 사회통합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통일직후 구 동독지역의 주민에게 행해진 정치교육은 공산주의의 의식을 털어내고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치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통합에 앞서 동독주민들이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체제의 구성원으로서 동화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시켜 동서독 간의 차이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었다.

독일통일은 동서독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지만 특히 이전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새롭게 다른 체제로 통합되는 동독지역주민에게 통일로 인한 변화는 더 크게 작용되는 것이다. 구 동독지역에서 유지됐던 모든 법적, 제도적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대체되면서 이전까지 지녔던 이념과 가치만이 아닌 이전의 지위와 신분 등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면이 부정되고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통일이후 시장자본주의체제로 편입된 동독지역 주민은 집단주의 원칙 아래 직장이 보장되던 환경에서 성과주의에 기초한 노동시장의 경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동독주민들에게 큰 도전으로 심리적 문제와 실업문제 발생 등에 따른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 등을 가져오게 하였다. 더구나 통일이후 동독지역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파견된 서독의 정당, 노조, 협회들은 동독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독인에게 통제받는 것으로 인식되었다.<sup>5)</sup>

3) 이종희 “통일 후 동독지역의 민주시민교육 :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토론문. 2016년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자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pp. 40-42.

4) 최영돈, “독일의 정치교육과 관점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토론문. 2016년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자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pp.70-77.

5) Dr.Martina Weyrauch, “독일 통일과 민주시민교육”, 선거연수원 국제심포지엄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제도화’, 발표문.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의식의 변화는 같은 속도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독주민들은 서독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동화되면서도 사회적 동질성은 그에 미치지 못한 채 서독과의 심리적 거리를 두었다.<sup>6)</sup> 특히 통일이후 기대수준에 부합되지 못한 불만스런 경제상황과 서독에게 종속됐다는 인식은 과거 동독체제의 이념과 가치를 그리워하는 오스텔지어의 현상 등으로 나타났다. 즉 새로운 질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불안감 등에 따른 정체성 위기 등을 경험한 동독주민들은 이전 동독체제에 대한 향수와 함께 유사정당에 대한 지지를 보였다.<sup>7)</sup> 따라서 당시 동독지역에서의 정치교육이 직면했던 문제는 동독주민에게 변화된 환경에 동화될 수 있는 역량함양의 교육만이 아닌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었다. 즉 동독체제가 존재했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이전 체제의 사회전반에 대한 부정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데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이었다.

통일이후 독일의 정치교육은 내적 통합을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사회통합위한 정치교육은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에 길들여져 있던 동독지역 주민들을 다원주의적인 정치문화에 동화시키고 시장경제체제 운영에 필요한 개인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키는 한편 새로운 전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sup>8)</sup>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은 동독만이 아닌 서독지역 주민에게도 동서독 통합에 대한 이해, 통합의 의의, 서독지역의 비용발생 및 감수에 대한 이해 중심으로 실시되었다.<sup>9)</sup>

통일직후 동독지역의 정치교육은 연방정치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확대하여 연방정치교육센터와 함께 각 주에 설치된 주 정치교육센터, 각급학교기관, 평생교육기관,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행해졌다.<sup>10)</sup> 또한 정치적 통합이후 동독지역은 기존 서독의 교육정책에 따라 새로운 통일국가의 교육이념 정립, 학제 및 교과과정의 변경과 교원의 재임용 등 교육체제의 재정립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통일이후 구동독지역은 교육시설의 낙후, 교육종사자들의 의식혼란 등의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동독인들의 심리적 불안감 등을 치유하는 것이었다.<sup>1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제도 등 서독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이 구 동독지역에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통일이전부터 동서독간의 상호교류가 이뤄졌던 결과였다. 1990년 10월 3일 제도적인 통일이후 서독지역의 연방주는 구동독지역의 신연방주와 자매결연을 통해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교육법령 및 행정지침의 초안부터 적용하는데 까지 원조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 동독지역의 교육환경이 서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으며 동독지역의 교사들의 대거 해고

2005.9

- 6) 통일직후 서독인들은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동독이주민 때문에 주택, 범죄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었고 동독지역 주민들은 실업문제 등으로 심리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 같은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관계는 상대방을 ‘게으른 오씨’(Ossis, 동독인)와 ‘거만한 베씨’(Wessis, 서독인)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황병덕, 앞의 책, pp.32-33.
- 7) 통일 5년 직후 여론조사(슈피겔의 여론조사 1995.9.25.)에서 동독지역주민들은 통일이후 ‘2등 국민으로 대접받는다’(72%)와 ‘마음의 벽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67%)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생활수준과 과학기술을 제외한 치안, 여성권리, 사회적 안정 등은 구 동독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병덕, 앞의 책, p.33.
- 8) 통일원, 『독일 통일백서』, 1994. p.109
- 9) 황병덕, 앞의 책, p.39.
- 10) 오일환, “통일을 전후한 독일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9집2호, 1995년, p.533-34.
- 11) 오일환, 위의 글, p.538

에 따른 교원 충원의 문제 등이 드러났다.<sup>12)</sup>

한편 통일직후 동독주민의 정치교육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전 체제에서의 주입식 이념 교육의 이미지를 쇠신 혹은 불식시키는 것이었다. 동독주민들에게 일방적 주입식과 같은 정치교육 방식은 또 다른 형태의 독재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시기 정치교육은 국가주도의 정치적 교화가 아닌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공영역의 정치교육센터 만이 아닌 교회와 정당, 노조와 각종 협회, 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이 행해졌다. 또한 교육방법도 주입식의 일방적인 지식전달의 교육이 아닌 강연회, 토론, 영화상영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올바른 인식과 판단능력 및 행위방식 등을 형성하게 하는 데 주력하였다.<sup>13)</sup>

## 2. 독일 정치교육의 시사점

통일이전과 이후 독일에서 행해진 정치교육은 통일이후 남북한주민의 민주시민교육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군사국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권위적인 정치체제의 기반을 제거하고 민주주의제도를 이식시키기 위한 연합국들의 정치적 의도에서 추진되었다. 나치즘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민주주의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독일국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통일이전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지역에 민주주의 제도와 민주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나아가 독일인들에게 공동의 소속감을 갖게 하여 통일에 앞서 정신적 유대를 공고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14)</sup>

통일이후의 정치교육은 동서독사회의 재결합을 모색하는 작업으로 구체화되어 국민통합을 위한 갈등과 이질성 해소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구 동독지역 주민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함양과 동시에 동서독주민간의 상호이해를 촉진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후 동독지역의 정치교육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우선 새 연방주로 편입된 동독지역주민들은 정치교육이 이전 체제에서의 강압적인 시민교육의 경험과 중첩적으로 인식되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sup>15)</sup>

또한 동서독지역 주민간의 이질화현상과 사회문화적인 차이는 제도통합만큼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구 동독지역주민들은 이전까지 유지되던 이념과 가치가 부정되고 새로운 질서에 일방적으로 동화돼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 등이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발전되었다. 이 같은 감정은 이후 서독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반감 혹은 극우적 성향과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등 반사회적인 현상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독일의 정치교육의 사례는 통일이후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사회심리적 일체감 형성 등을 위한 통합교육은 장기적인 과제로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다. 독일통일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내적 통합을 위한 정치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말

12) 정영수, '통일후 독일교육의 변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제 14권 2호, 1992년, pp. 78-79

13) 정기섭, '독일 민주시민교육방법론 사례분석', 선거연수원, 제 12회 『민주시민교육국제심포지엄자료집』 2016년, pp.49-50.

14) 이규영,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국제지역연구』 9권 3호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005년

15) 김영국, "통일독일의 정치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연구』 6권, 1997년, pp. 292-93



해주고 있다. 예컨대 신연방주인 작센주에서의 극우세력이 강하게 대두된 원인은 다양하나 동독 정치문화의 잔재가 한 원인으로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었다.<sup>16)</sup> 통일이후 동독주민들이 새로운 민주적 가치와 규범, 행동방식 및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 동화되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또한 통일직후 동서독주민간의 이질화와 심리적 불안감 등의 또 다른 요인은 통일직후 동독의 생활환경이 서독지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회경제적인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물론 동독주민의 불만족에 따른 사회적 일탈현상 등은 동독지역 주민의 통일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려는 자세 부족 등이 작용되기도 했다.<sup>17)</sup> 통일이후 변화된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의 생활 수준등과 관련되어 있어 직업수준과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통일직후 구 동독지역 주민의 의식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에 잘 드러나 있다. 통일이후 20년의 기간(1989-2009년까지)에 신연방주 주민의 의식의 변화추이를 볼 때 이들의 만족도는 통일이후 시기별 변화양상과 발전 속도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예컨대 통일직후 5년간은 개인적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속에 사회적 만족도가 대폭 증가하다 이후 5년간은 사회발전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후 점차 서독지역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감소되었다. 이후 보건·연금·노동시장개혁 등과 유로화로의 전환과정 속에 사회적 불만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되면서 전반적으로 동화과정의 정체를 보이거나 부분적으로 불평등이 확산되는 과정이 이어졌다.<sup>18)</sup>

위의 의식조사에서 볼 때 신연방주 주민의 독일연방공화국과의 유대감은 개인의 상황과 관련이 있어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유대감을 강하게 느끼며 실업자와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동독으로 복귀를 원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sup>19)</sup> 따라서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식된 체제로의 동화를 위한 정치교육 이외에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통일이후 동독주민이 보여준 의식의 변화가 사회경제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단계별 교육내용과 함께 집단별 맞춤형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sup>20)</sup>

통일전후 독일의 정치교육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남북한 주민의 사회심리적 일체감을 모색하기 위한 정치교육은 지난한 과정이며 독일에 비해 분단기간이 길어 이질감이 더 클 뿐 아니라 남북한 전쟁으로 인한 적대감 형성으로 사회통합이 더 어려울 것이 예견된다. 즉 남북

16) 보수 포플리즘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 세력 급증과 반 이슬람적이고 극우사상 전파하는 ‘페기다운운동은 작센 연방주 수도 드레스덴에서 시작됐는데 ‘14 아테나워재단 연구보고에 따르면 학교에서 정치교육 수업시간이 가장 적은 주가가 지난 수개월 동안 자주 부정적인 머리기사를 제공하고 연방전체에서 인종주의자 및 반민주주의자들의 피난처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Thomas Kruger, “동독정치교육의 특이점”, 제 6차 한독자문위원회 2016년 5월

17) Josephine Evans, “통일 후 동독지역의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선거연수원, 제 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자료집』 2016년, pp.33-36

18) 통일부, 『독일 통일 통합정책연구』, “1989~2009년까지 20년간의 평화로운 혁명, 신연방주 주민들의 시각 2009년 7월 20일”, 2011년 P.198.

19) 위의 글

20) 2014년 할레 대학교 사회연구소가 14세 이상의 국민2100명을 대상으로 “우리는 한민족인가”라는 질의아래 25년 독일통일이후 동독의 정치문화를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통일이후 태어난 세대와 이전의 출생세대의 의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할레-뵘베르크-뮌스터대학교 할레사회과학연구원 센터 설문조사의 ‘DEUTSCHLAND2014, “Sind wir ein Volk?”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 교류협력과 상호이해가 독일보다 적어 남북내적 통합을 위한 정치교육은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여기에 북한주민들은 70년 이상 동안 외부세계와 단절된 공간에서 사회주의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익숙하여 민주시민의식과 역량 함양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은 북한주민이 통일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동화되기 위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함양의 교육을 통해 남북한 주민 간 내적통합을 달성하는 것이다.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볼 때 완전한 내적 통합은 달성되기도 어렵지만 오랜 기간 분단에 의해 조건 지어진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와 심리적 차이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 후 내적통합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변화만이 아닌 두 체제 모두 통일로 인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구 동독지역에서는 공산당 독재를 청산하고 서독지역에서는 통일시대에 맞게 상호이해, 관용, 포용 등의 민주문화를 새롭게 지향함으로써 양 지역 주민들이 사회경제적 동화와 사회문화적 연대감을 갖는 것이 내적 통합의 과제이다. 그러나 동독주민들은 통일직후 새로운 사회 환경 속의 동화과정이 순조롭지 않았고 여기에 서독주민들의 비 포용적인 태도로 구 동독체제에 대한 향수 등의 퇴행적인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sup>21)</sup>

독일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통일직후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적 통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남북한 주민 모두 상호 동화 속에 연대감의 형성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통일은 특히 이전과 완전 다른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경험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과거와의 단절만이 아닌 청산의 문제로 인해 고통과 함께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후 북한주민 대상 정치교육의 과제는 통일이후 무력감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 및 정서안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한편 통일이후 북한주민 대상의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연방과 주 정치교육센터와 정당, 시민대학, 종교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이후 동독지역에서 국가 주도의 정치교육에 대한 저항감을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공공부분에서만 아닌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 연대 속에 행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 Ⅲ. 북한주민의 특성 및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

통일직후 북한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는 북한주민의 특성이다. 북한주민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삶과 가치관 형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북한체제의 특성이 분석돼야 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도자 일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절대 권력체제로서 이를 정당화하고 유지·강화하는 통치담론과 문화

21) Josephine Evans, '통일 후 동독지역의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앞의 글

등을 통해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절대 권력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혁명적 수령관,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의 통치담론 등을 통해 체제 순응적 마인드를 지닌 주체형의 새 인간, 집단주의, 획일적인 가치관을 지닌 북한주민의 삶과 의식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난이후 제한적이긴 하나 시장화현상 등 자본주의적인 경제활동의 허용 속에 북한주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의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주민의 생활은 경제난이전 북한당국이 지향해온 이념과 가치관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북한주민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의식조사 결과를 참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통일이후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북한주민들이 순조롭게 동화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하는 지 등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의 정착사례는 통일이후 북한주민이 경험하게 될 것들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과제 등은 통일이후 남북한주민의 통합방안 모색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은 통일이후 사회통합 차원에서 북한주민에게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해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주민의 특성에 부합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의식조사 결과와 정착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북한주민의 생활과 의식

통상 민족 혹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특성은 자연환경과 인종적 특성 이외에도 정치경제체제와 같은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어 북한주민의 특성은 북한체제의 특징에서 규명될 수 있다. 북한체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인 1당 지배체제의 특성과 동시에 수령중심의 절대 권력을 정당화하는 통치이념에 의해 지배되는 유일지배체제이다. 특히 북한은 억압기구에 의해 체제가 운영되며 단일 지배정당, 통제경제, 권력세습 등의 요소들로 운영되는 전 근대적인 체제이다. 이 같은 전체주의적인 체제에서 북한주민은 당국이 지향하는 집단주의, 수령중심의 가치관을 지닌 채 일상생활이 획일화되어 있으며 조직생활을 통해 통제된 삶을 영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이후 북한체제는 사회전반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북한주민의 생활과 의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경제난이후 식량배급과 각종 사회서비스 공급이 중단되고 중앙통제체제가 이완되면서 북한주민들은 장사 등과 같은 자력구제방식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과 의식에 변화를 겪게 되었다. 북한주민의 시장을 통한 생계활동은 빈번한 사회이동과 외부정보의 유입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전의 조직생활의 규율과 그에 따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희박해지게 되었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사경제활동으로 인해 개인주의와 ‘돈이 최고’라는 의식과 ‘물질적 풍요가 중요하다’는 의식과 함께 가족단위의 생존방식에 따른 가족이기주의적인 경향까지 드러내고 있다.

경제난이후 북한주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탈집단주의, 가족주의 등의 만연은 국가와 정권에 대한 충성도와 신뢰도 약화 및 불만 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의식의 변화여부와 그것이 북한정권과 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찰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의 설문결과 -2008년부터 매년 동일지표로 탈북한지 1년 이내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실태, 대남인식, 남한 사회적응실태 등에 대한 의식조사 수행-를 활용하고자 한다.<sup>22)</sup> 이 조사 결과는 현재 제한된 여건에서 한정된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조사 표본의 대표성과 일반화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sup>23)</sup>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북한주민의 생계유지방식은 대체로 비공식적인 사경제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거주 시 공식 월수입에 비해 비공식 월수입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소득의 월수입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절반정도가 최근 5년 사이에 공식 월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고소득의 월수입에 대한 응답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sup>24)</sup> 이 같은 결과는 북한주민의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의 규모가 커지면서 고소득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빈부격차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주민의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의 증가는 사회통제이완 현상 등과 같은 북한 사회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5)</sup> 북한주민의 사경제활동에 따른 잦은 지리적 이동은 직장출근과 생활총화의 참여 등의 조직생활과 규율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된 한편 외부정보의 습득도 이뤄지면서 점차 정치적 비판행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생계활동의 터전이 되고 있는 시장은 경제행위이외 다양한 정보교환 등이 이뤄지면서 북한주민들의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와 남한문화의 접촉경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거주 당시 남한 사회에 대한 정보취득여부와 이에 대한 친숙도 정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남북한의 사회문화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sup>26)</sup>

경제난이후 변화되고 있는 북한주민의 생활양상은 자연스럽게 북한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공식적인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는 집단보다 개인을 더 중시하는 개인주의가 북한체제의 사회윤리였던 집단주의보다 중시되는 한편 장사와 가족농사 등 혈연과 가족단위의 생존방식에 의해 가족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사경제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보다 자본주의경제체

22) 북한이탈주민대상으로 북한실태, 대남인식,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남한사회 적응 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설문지표에 대해서는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의 『북한주민통일의식』 2008~2017년을 참조하면 된다.

23) 조사대상의 탈북민들은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고 연령별로는 20-40대가, 교육수준은 고등중학교 출신이, 직업별로는 노동자가 가장 많으나 점차 노동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장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4) 공식 월수입이 '0원'이라는 응답률은 '11년 32.9%, '13년 52.7%, '14년 61.1%, '15년 54.8%, '16년 54.8%, '17년 47%로 증가했으며 '100만원 이하'의 응답('11.7.3%→'17.13.6%)과 '100만원 초과'의 응답('11.7.3%→'17.26.5%)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 재북 시 장사의 경험이 묻는 질문에 로 응답자의 약 70%가 장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11.71.3% →'12.69.8%→'13.74.4% → '14.69.8%→ '15.76.7%→'16.68.8%→ '17.69.7%)

26)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을 접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3.6%(2008년) →57.1%(2009년)→76.7%(2011년)→90.0%(2012년)→88.0%(2013년), 박명규 외, 『남북통합지수2008-2013』 변동과 함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13년.

제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이후 북한주민들의 시장자본주의 체제에 의 동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sup>27)</sup>

통일이후 북한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점 가운데 하나는 통일에 대한 북한주민의 생각이다. 이에 대한 고려는 통일이후 환경 변화에서 북한주민이 어떤 행동양태를 보일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

## 2. 북한주민의 통일 및 대남의식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은 남한주민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통일의 필요성 인식은 거의 긍정적으로 자신만이 아닌 다른 북한주민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sup>28)</sup> 같은 시기 남한 주민의 통일 필요성 인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과 대비되고 있다.<sup>29)</sup>

또한 북한주민의 통일에 대한 기대감에서 집합적 이익을 개인적 이익보다 크게 생각하고 있는 점에서 남북한주민 모두 같으나 통일이 가져다 줄 편익에 대한 북한주민의 기대감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sup>30)</sup> 통일에 대한 남북한주민간의 기대감의 차이는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는 남북한의 현실에서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주민은 잘사는 남한과 통합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남한주민은 열악한 북한과의 통합이 혜택보다는 비용증가라는 인식 아래 통일편익보다 통일비용을 크게 고려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주민이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통일이후 빈부격차, 실업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등의 주요 사회문제들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지역갈등과 이념갈등보다 빈부격차와 실업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1)</sup>

이 같은 결과는 북한주민이 통일의 경제적인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한편 통일이후 예상했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날 좌절감과 불만 등 부정적인 여파도 예상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발전정도와 주민의 생활수준이 남한지역의 수준

27) 재북 시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는가의 질문에 자본주의체제를 지지했다는 응답이 사회주의체제의 지지 응답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15년 자본주의: 사회주의=79:11)

28) 재북 시 통일의 필요성인식에 대한 물음에 자신을 포함한 북한주민 모두 절대다수가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필요성인식에 대해 '11년.95.2%, '12년.93.7%, '13년.93.3%, '14년 100%, '15년 97.9%, '16년 94.9%, '17년 97.7%; 북한주민의 통일필요성인식은 '11년 99%, '12년 99.2%, '13년 97.8%, '14년 97.4%, '15년 97.3%, '16년 94.9%, '17년 98.5% 로 나타났다.

29) 남한주민의 통일의 필요성인식은 '07년 63.8% →'17년 53.8%로 감소되는 등 국민들의 통일무관심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국민통일의식』에 있다.

30) 남북한주민의 통일의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이 사회에 가져올 편익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 '11년100%(남한 50.7%),'12년96.9%(51.5%),'13년99.3%(41.9%),'14년98%(55.5%),'15년 99.3%(57.4%), '16년 98.6%(53.0%), '17년99.3%(52.1%); 개인에 대한 이득은 '11년 95.2%(27.8%), '12년 94.5%(20.0%) '13년 95.5%(21.8%),'14년98%(27.3%), '15년 97.9%(28.0%), '16년 97.8%(24.6%), '17년96.2%(23.9%)로 응답했다.

31)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에 대한 개선의 기대감의 응답률은 지난 5년간 평균 50% 수준인데 비해 빈부격차와 실업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평균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자세한 수치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발행 『남북통합지수』 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 도달하지 못할 때 지역갈등도 예상될 수 있다.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간의 이질화와 심리적 불안정의 문제 등이 사회경제적인 수준 격차가 큰 지역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라는 점에서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 이후 남북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민주시민역량 강화의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에 있어 고려돼야 할 점은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이다. 북한주민들은 남한주민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이 잘 어울려 지낼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도 북한주민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남북한 주민 모두 서로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통일과 통합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남북한주민 간 상호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남북한주민 안에 연령별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북한주민에 비해 남한주민의 대북인식은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인식의 차이는 통일 이후 내적 통합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어 통일 이후 남한주민에 대한 내적 통합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sup>33)</sup>

또한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인식에 있어 집단별 편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통일 및 대남 인식에서도 세대 간 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20대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60대로 올라갈수록 협력의식이 약하고 통일 이후에 남북한주민이 잘 어울려 지낼 것이라는 응답에서 20대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60대 이상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sup>34)</sup> 이 같은 사실은 통일 이후 북한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있어 연령별, 집단별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사례

통일 직후 북한주민이 통일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 북한주민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어떤 행동양태를 보일 것인지 그래서 어떤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지 등이 북한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이다. 통일에 앞서 남한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사례는 이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일련의 정책적 노력은 많은 변화 속에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은 최초 '보호 지원'에서 '자립 자활'을 넘어 현재 '사회통합'의 지향으로 변화되면서 지속적인 보완 속에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의 성공적인 정착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양적 지표에 있어 긍정적인 수

32) 북한주민의 대남 협력의식은 '13년 63.6%→'14년 57.6%→'15년 62.8%로,→'16년 53.3%,→ '17년53.8% 적대의식은 '13년 12.9%→'14년 20.8%→'15년 16.6%→ '16년 22.6%,→ '17년23.5% 로 나타났다.

33) 남한주민들의 대북인식은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어 협력대상으로의 인식이 감소('07년 56.6%→'17. 41.9%) 하는 한편 적대대상으로 인식은 증가하고 있다.('07년 6.6%→'17년 16.2%)

34)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북한주민통일의식 2015』, 2015년 P.66

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과 평균 소득 등의 지표가 남한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하나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5)</sup>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포용력에 대해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어졌다.<sup>36)</sup>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에 비해 남한주민의 포용성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통일이후 내적통합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해 통일이전부터 내적통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남북한 주민 간 상호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한편 남한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만족도 등을 묻는 질문에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으나 향후 그들이 기대수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을 발생할 소지는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 정착 후 자신이 북한사람인지 남한사람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체로 남한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체성은 친근감과 포용성과 관련이 있었다.<sup>37)</sup> 남한주민에 대한 정서적 친근감이 높은 사람들과 남한사회가 자신들에게 포용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남한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람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사람의 포용성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인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이다. 만족감이 클 경우 남한사회의 경제·사회활동 참여의 동기부여가 되며 남한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될 수 있지만, 상실감이 클 경우 탈북에 대한 회의감, 정체성 혼란, 남한사회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높을 것이다.

남한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생활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8)</sup> 남북하나재단이 2013년부터 매년 국내 입국한 북한이

35) 탈북민의 실업률은 점차 떨어지고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탈북민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남한주민의 것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14년	2015년	2016년
고용률(탈북민/남한주민)	53.1%/60.8%	54.6%/60.7%	55.0%/61.0%
실업률(탈북민/남한주민)	6.2%/3.2%	4.8%/3.4%	5.1%/3.8%

위 통계치의 세부사항과 내용은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실태조사'와 '사회통합조사' 자료집 2014~2016년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남한주민에 대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를 차지('11년91.3%, '12년 89.7%, '13년 87.3% '14년 90.6%, '15년91.7%, '16년90.6%, '17년92.4%)하고 있으며 남한사람들이 탈북민에 대해 포용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다. ('11년 76.9%, '12년 70.6%, '13년 79.7% '14.66.5%, '15,72.6%, '16.76.1%, '17.78.8%),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이탈주민 통일의식조사』

37) 남한정착이후 자신이 북한사람과 남한사람 중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남한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율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70%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1년 74.3% '12년 64.3 '13년63.9%. '14년67.8%, '15년 68.5% '16년 68.1%, '17년 72.7%) 정체성은 친근감(69.7%), 포용성(71.2%)과 관련이 있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앞의 책

38) 남북하나재단이 2013년부터 매년 국내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조사 및 사회통합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남한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매우 만족 + 만족)'는 응답은 ('14년 67.6%, '15년 63.0%, '16년67.0%) 보인 반면, '불만족 한다(매우 불만족 + 불만족)'는 응답은('14년 3.4%, '15년3.4%, '16년 3.5%) 로 나타나고 있다.

탈주민 가운데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조사 및 사회통합조사를 한 결과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sup>39)</sup>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난 속에 자유도 없는 북한의 생활보다 남한살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있을 것이다.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 등을 가장 많이 들고 있으며 반대로 불만족한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지원 증가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0)</sup>

이런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생활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경제수준의 향상이다. 앞서 살펴본 북한주민들의 통일인식에서도 북한주민이 통일직후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경제적 편익인 점에서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한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에 있어 점차 긍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남한주민에 비해 고용률과 실업률 그리고 월평균 임금수준에서 차이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sup>41)</sup> 여기에 더해 탈북민들의 직업이 단순 노무직과 서비스직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통일 후 북한주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이후 북한주민들의 안정된 경제적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직업훈련 교육 등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이후 북한주민대상 교육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분야는 문화적인 측면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정착과정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언어와 문화차이로 남한주민에게 차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소통방식의 문제였다고 응답하고 있다.<sup>42)</sup> 일상적인 생활에서 문화적 차이는 통일이후 내적통합에 있어 크게 작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통일직후 북한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

39) 남북하나재단은 1997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내 입국자 중 만 15세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주거 및 가족실태, 생활만족도 및 교육실태, 경제활동상태, 건강, 의류 등 정착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를 해오고 있다.

40) 탈북민들은 남한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14년 47.4%, '15년 46.7%, '16년 47.3%)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생활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14년 42.3%, '15년 43.3%, '16년 44.7%)에 이어 '내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14년 40.7%, '15년 41.1%, '16년 39.4%)라는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만족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인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14년 54.7%, '15년 61.3%, '16년 58%)였으며 그들이 '향후 받고 싶은 지원 사항'이 '경제적 지원-생활비 보조 등'이('15년 36.3%, '16년 41.9%)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이탈주민 통일의식조사』

41)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남한전체의 고용률이 60%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50%이며 실업률은 남한전체가 4~5% 초반대를 유지하는 데 반해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6%대이다. 월평균임금에 있어서는 남한전체의 월평균임금이 230만 원대를 유지하는 데 비해 북한이탈주민은 '14년 147.1만원, '15년 154.6만원, '16년 162.9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북하나재단 발행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42) 탈북민들은 북한 출신으로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이유로 '말투, 생활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이라는 응답이 ('14년 68.6%, '16년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이탈주민 통일의식조사』



#### IV. 통일이후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개발시안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의 덕목과 역량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정에 따라 다의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통상 민주주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시민의 덕목과 역량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종합할 때 민주시민은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공공의 정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의감’ 그리고 ‘정중함과 관용’ 등의 자질을 지녀야 한다고 보고 있다.<sup>43)</sup> 민주시민교육은 이런 민주시민의 덕목 함양을 위해 사회 도덕적 책임성, 비판적 사고,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등의 자질 함양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통일직후 북한주민 대상 민주시민교육은 이 같은 민주시민의 덕목과 자질함양을 목표로 행해져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주민이 통일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화, 융합되기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독일 정치교육의 사례에서와 같이 북한주민대상 민주시민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북한주민에게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다원적인 사회를 지향하고 있어 이에 부합되는 가치관과 행동양태를 체득할 수 있는 지식과 실천역량함양이 북한주민 대상의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즉 자유, 평등, 인권, 복지 등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선거와 투표, 다당제원리, 법의 지배 등의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원리 등을 습득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설득과 타협’, ‘다양성 존중’, ‘차이와 관용’ 등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함양을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sup>44)</sup>

두 번째는 통일한국에서 남북한 주민이 같은 구성원이라는 의식 속에 하나의 공동체 안에 통합되는데 중점을 둔 공동체의식 함양의 교육이 주요 내용을 이뤄야 할 것이다. 통일이후 남북한 지역 주민의 내적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통일한국 사회에서 정치·경제적 동화에 이어 사회·심리적 연대감 속에 남북주민 모두 같은 구성원이라는 일체감을 갖기 위해 상호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점차 동질성을 확대해갈 수 있는 상호이해교육 등이 행해져야 한다.

##### 1. 통일단계 구분

통일이후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있어 또 다른 고려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어떤 교육이 행해져야 하는지이다. 나뉜 남북한의 영토와 제도가 하나로 통합된 후 사회통합까지 이뤄지는 과정은 오랜 시기 속에 여러 단계를 거쳐 달성될 것이며 통합달성에 있어 각 단계별 요구되는 내용은 다를 것이다. 통일이후 사회통합이 이뤄지는 과정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나 우선 제도 통일이후 사회 분야별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북한주민의 변화된 통일 환경에 적응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이후

43) 시민교육에 관한 다양한 문헌자료 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민교육의 공통적 요소를 정리하고 있는 문헌과 민주시민역량에 대해 잘 정리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Cogan, J. J., Citizenship for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education. Kogan Page, 2000; Kymlicka, Will. Education for Citizenship. James Arthur and Ian Davies(ed.). Citizenship Education Vol 1. Sage Library, 2008.

44) 한국교육개발원,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1-09, pp.93-4.

북한주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동화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단계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의 정착사례와 함께 앞서 통일된 국가의 사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독일의 경험과 사회주의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기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체제에 적응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최소 5년으로 새로운 체제를 이식하는 데 최소 5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동독이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된 시점과 서독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대체로 5년으로 산정하고 있다.<sup>45)</sup>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처음 1년의 적응기간과 이어 적응, 부적응을 반복하는 약 5년의 시간이 흐른 후 체제에 안착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sup>46)</sup>

이상의 새로운 체제로 전환 혹은 통합의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통일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에서 최초 변화된 환경의 동화를 위해 수용의 태도를 보이는 적응기와 정착과정에서 적응과 부적응을 교차 경험하는 과도기 그리고 이후 안정화단계에 접어드는 안정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통일직후 5년은 통일의 전 과정에서 과도기라 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이 시기의 변화를 고려하여 3단계로 세분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통일직후 북한주민이 급격한 체제 변화에 직면하여 적응과 혼란을 거쳐 새로운 사회에 안착되기까지 최초 5년의 과도기에 해당되는 기간을 세분하여 초기 적응기, 과도기, 안정기의 3 단계로 상정하고 각 단계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단계별 교육목표 및 방향

통일직후 북한주민의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은 통독이후 동독주민대상 교육경험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경험을 고려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북한주민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에 있어 독일사례의 시사점도 중요하지만 같은 교육대상으로서 유사한 특성을 지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경험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경험 등을 고려하여 세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의 정착과정에 보여준 정착 경험을 고려하여 통일직후 북한주민 대상 교육목표와 내용 및 방식 등을 마련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정착 직후 최초 1년은 법과 제도적인 정착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지는 시기로 부정보다는 긍정의 마인드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주민의 남한사회로의 이주에는 다양한 개별적인 사유가 있지만 대체로 보다 나은 삶의 향유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탈북민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새로이 직면한 남한사회의 제반 규범 등을 체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통일이후 북한주민들도 유사할 것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의 교육은 통일한국체제의 기본 원리와 법, 제

45) 오수웅, “통일단계별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개발과 활용방안: 루소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선거연수원 ‘제 11회 민주시민교육국제포럼’ 발표문, 2015년 9월

46) 북한이탈주민은 대체로 남한사회정착이후 처음 약 1년 동안은 적응하기 위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나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이웃과의 갈등이나 사업실패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남한체제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갖게 되는 과정을 거쳐 약 5년째가 되면,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과 함께 체제에 안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수웅, 위의 글, 7쪽

도 등 제반 특징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직후 초기 적응단계는 북한주민이 통일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화가 최우선의 과제이므로 이 시기의 교육목표와 방향은 통일한국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는데 두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부합되는 구성원으로서 역량함양을 위해 통일한국체제의 특성에 관한 지식과 실천역량의 배양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줄 수 있는 심리적인 측면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초기 1년 정도의 적응기를 거쳐 두 번째 단계는 새롭게 습득한 지식과 정보 등을 토대로 이를 실천 혹은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공과 좌절의 경험을 통해 적응과 부적응의 태도를 보이는 과도기이다. 이 시기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여러 자립생활의 과정에서 시행착오 등을 경험하면서 이전의 일방적 수용의 태도에서 벗어나 갈등과 저항들이 표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통일직후 북한주민들도 초기 수용의 태도를 보이는 적응기를 거쳐 적응과 부적응을 거듭하는 과도기에는 불만과 갈등 등이 많이 표출될 것이다. 즉 통일이전 통일한국에 대해 가졌던 기대와 희망이 통일이후 달성되지 않을 경우 불만, 갈등, 저항 등으로 발전될 것이다. 특히 이 시기 북한주민들은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방식, 사회적 관계 등이 이전의 것들과 비교, 경쟁 속에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내적 갈등 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북한주민 대상 교육의 목표는 도덕성 함양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북한주민들이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며 감정 통제 및 갈등의 조절과 평화적 해결 등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적응기와 과도기를 거쳐 안정기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수용과 적용 등 그동안의 체제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특히 이 시기 북한주민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일차적 적응을 기초로 통일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정치사회활동에 참여가 이뤄지는 특징을 보일 것이다. 즉 북한주민들이 통일한국의 구성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 속에 정치 및 사회활동에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육목표는 정치성 함양으로 통일한국사회에서 형성된 정체성과 도덕성 등을 기초로 각종 사회활동에서 그들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절차와 방법 등과 같은 이론교육과 함께 실제 시민단체와 지역단체에서의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등의 실천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 3. 통일단계별 교육내용 및 방법

통일직후 북한주민대상 단계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앞서 제시된 통일 단계별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 그에 부합되는 것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은 기존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정착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재구성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회의 정착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통일부 산하 하나원을 비롯하여 선거연수원, 국회의정연수원 등 여러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sup>47)</sup> 기관의 특성

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민주시민교육 등이 행해지고 있으나 교육내용의 구성은 남한사회의 정착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 기존의 이들 교육프로그램을 참고하며 특히 하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통일직후 북한주민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화 속에 이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 왔다. 초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에서 자립자활의 정책으로 변화하면서 직업훈련과 고용지원 등 취업률제고에 초점을 둔 교육프로그램이 보강되었다. 최근의 탈북민정책은 2006년 말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계층별, 집단별 맞춤형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다양한 탈북 이유를 지닌 다양한 계층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되는 추세에 맞게 이를 반영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것이었다.

이런 요구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대상별 맞춤형과 더불어 탈북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정책으로 변화되면서 교육 프로그램도 보완되었다. 2017년 현재 하나원의 탈북민 사회적응 교육계획은 자립자활의 맞춤형의 교육과정과 일반국민과 선배 탈북민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사회통합형의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개편 추진되고 있다.

개인별 수준·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분반운영 및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여 성인반 및 청소년반 등에서 수준별 분반이 확대 운영되고 있다. 48) 수준별 분반 수업은 정보화 수준과 심리적 상태 등을 감안하여 정보화 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수업에서 이뤄지며 특히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을 통한 과목별 분반 수업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상별 맞춤형의 교육프로그램은 통일직후 북한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있어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것이다.

또한 탈북민의 자립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개인별 ‘생애설계(Life-Plan)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선배 탈북민과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사회통합형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되고 있다. 연령, 학력, 경력, 개인별 욕구 등 탈북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 취업, 가족, 학업, 건강관리 등 ‘생애설계’ 분야별 협력기관 및 전문가를 선정하여 목표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방안 등을 설계하는 것이다. 49) 5년 기준으로 작성된 생애설계안은 향후 표준안을 마련하여 활용할

47) 선거연수원에서 과정별 민주시민교육 중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수(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이해, 유권자로서의 올바른 권리행사 등)와 탈북여성 민주시민교육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의정연수원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국회민주주의 교실 운영(자유민주주의 이해, 대한민국국회바로알기, 시장경제 및 생활체험, 충효인성교육, 대한민국역사 짚어보기 등)하고 있다.

48) ‘우리사회 이해’와 ‘진로지도’는 공통의 수업외의 교육생 수준과 선호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특화반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16년 35h·’17년 70h) 이에 관한 세부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용
우리사회이해 특화프로그램	정치·사회·경제·금융·법률 교육(13h), 언어·문화·시사·생활민원 교육(18h), 경제·생활·문화 현장체험학습(25h), 심리적 갈등 관리 & 직장 예절(7h), 정보화 교육(7h)
진로지도 특화프로그램	선택 직업군(2개) 관련 기능 심화훈련 및 취업현장 체험(1개 직군 당 35h) ※ 5개 직업군 중 2개 직업군 선택 및 수강

49) 맞춤형 생애설계를 위해 지정된 분야별 협력기관은 다음과 같다.

예정으로서 통일직후 북한주민 대상 자립자활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5개 분야의 생애설계과정을 이수한 탈북민들 대다수가 만족을 표현하고 있어 '맞춤형 생애설계의 표준안'은 통일직후 북한주민들의 통일한국사회에 동화를 넘어 남북한주민간의 연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sup>50)</sup> 탈북민의 남한사회의 성공적인 정착여부를 결정짓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립자활의 성공여부라 할 때 맞춤형 생애설계안은 통일직후 북한주민의 통일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탈북민의 자립자활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생과 선배 탈북민 또는 전문가 간 「멘토-멘티」 연계를 일대일의 멘토링부터 1박2일 가정체험, 도시문화체험 등 다양한 방식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sup>51)</sup> 이 프로그램은 북한주민의 남한사회의 동화를 넘어 남북한 주민 간 연대감을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통일직후 북한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탈북민의 자립자활의 집단별 맞춤형의 교과과정 등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은 통일직후 북한주민의 통일한국사회의 동화와 통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직후 통일단계별 북한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기존의 탈북민 대상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통일단계별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하여 재구성하여 마련할 수 있다. 기존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은 정서안정·건강증진, 우리사회 이해, 진로지도, 초기 정착지원, 생애설계과정 등 5개의 분야에서 관련 세부 내용으로 성인반(정규 및 보충교육), 경로반 및 청소년반, 유치 초등 및 영아반 등 집단별 맞춤형 세부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은 초기 정착단계에서 3개월 과정의 교육계획이지만 교육내용은 3개월에 모두 취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통일이후 북한주민이 통일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까지 지속돼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직후 초기 적응기에서는 기존 5개의 분야의 교육주제 아래 통일한국의 구성원으로서 동화되어 정체성 형성을 목표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통일직후 최초 단계인 적응기의 북한주민대상 교육은 통일한국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통일한국체제에 동화될 수 있도록 통일한국체제의 제반 운영원리와 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제공 등이 교육내용으

구분	분야	협력기관 선정
필수	재 무	국민연금공단 노후지원센터(총 10여명)
	취 업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수원 팔달지역 센터 총 10여명)
	가 족	건강가족진흥원(경기지역 5개 센터, 5명)·서울변호사협회(5명)
택1	학 업	한국교육개발원·하나재단 등 진학지도 전문가 등(총 5명)
	건강관리	국민연금공단 노후지원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총 5명)

50) 맞춤형의 생애설계과정은 2017년 하나원에서 새로 신설된 과정으로 228기 61명 대상으로 5개 분야(취업, 재무, 가족, 학업, 건강 등) 생애설계를 시범실시한 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만족의 의견을 표시(95.7%)하였다.

51) 선배 탈북민의 정착경험 등을 전수하거나 혹은 관심분야의 전문가와 직접 조언 등을 듣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교육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재북 시 전문직을 지녔던 교육생과 정착에 성공한 전문직 탈북민 또는 남한 내 전문직 종사자와 매칭하는 1:1 멘토링과 非전문직 교육생의 경우 분야별(농업·창업·생산직·서비스직 등) 선배 탈북민·직군별 전문가를 멘토단으로 구성하여 1:多 그룹 멘토링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관련 학과 대학생 및 탈북학생 지도 경험을 보유한 단체와 연계한 멘토링을 운영하고 1박2일 가정체험과 도시문화체험 및 봉사활동과 원내 종교활동(기독교·불교·천주교) 후 종교 관계자 및 남한 주민과 멘토링 연계 등의 소셜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로 구성돼야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다원적인 사회문화 등 통일한국체제의 전반적 특징과 함께 이에 부합되는 가치관과 행동양태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활동 등이 교육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기존 하나원의 탈북민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통일직후 북한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아래 표의 교육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북한주민 대상으로 실제 교육운영은 집단별 대상의 수준과 관심 등을 고려하여 세부 교육내용과 방식은 다르게 구성돼야 한다.

교과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심리 치유 프로그램, 대인관계의사소통기술훈련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위기정서 관리 등	체험·참여 강의식
	건강관리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교육, 성교육, 체육활동 등	체험·참여 강의식
통일한국사회 이해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인권이해, 한국정치와 민주주의, 선거제도이해 및 투표실습, 준법교육, 시민윤리 함양 등	체험·참여 강의식
	시장경제 적응교육	시장경제이해, 생활경제(가계경제, 소득관리, 합리적 소비 생활 등), 생활금융(금융이해,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보험, 사기예방교육 등), 사회보장제도이해 등	체험·참여 강의식
	사회이해 교육	한국문화의 이해(가치관, 정서이해, 생활문화 및 예절 등), 대중매체의 이해, 사이버세계이해(사이버문화와 정보윤리, 사이버정보활용에 대한 자유와 책임 등), 역사이해, 남북 한사회비교, 생활법률(남북한 법제비교, 국가와 법, 개인 생활과 법 등), 주요 도시특성 이해 등	체험·참여 강의식
	언어적응교육	남북한언어비교. 언어와 문화, 외래어 등	강의식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프로그램	기초검사 및 취업제도이해 교육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이해, 취업관련법이해	강의식
	직업정보 및 취업안내교육	직업이해, 구직서류 및 면접준비, 진로지도종합안내 등	강의식
	기초직업적응 교육	직종설명 및 체험교육, 정보화교육, 기업탐방 등	체험·참여 강의식
생애설계 프로그램	생애설계	건강관리 및 학업분야, 재무분야, 가족분야, 취업분야 등 생애설계교육 등	체험·참여
초기 정착지원	정착지원제도이해 프로그램 행정지원프로그램	초기 정착지원 안내 의료지원제도 이해	강의

과도기는 통일한국사회에 새롭게 습득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가치관과 행동들이 이전의 체득된 것들과 충돌 등이 생겨나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조정 등을 할 수 있는 도덕성 함양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 이로써 이 시기의 교육내용은 초기 적응기 단계에서 행해졌던 교육 분야에서 초기 정착지원 분야는 제외하고 진로와 생애설계 등 자립자활의 교육프로그램

은 재교육차원에서 수정보완 속에 추진돼야 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의 북한주민에게 요구되는 교육의 내용은 합리적 판단과 갈등의 조정 및 평화적 해결능력 등의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으로 이를 위한 이론교육만이 아닌 실습 등의 방식으로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안정기는 북한주민이 통일한국사회에 적응하여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단계로 각종 정치사회활동에 주체자로서 참여가 이뤄지는 시기로 이런 활동을 돕는 정치성 함양이 교육의 목표이다. 이로써 이 시기 북한주민대상 교육은 평생교육차원에서 이전단계의 교육주체의 보충 교육 혹은 재교육이 이뤄지는 가운데 통일한국의 법과 정치제도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활동 등의 실천 교육 등이 주요내용으로 구성돼야 한다.

## V. 결론: 통일교육에 시사점

이 연구는 통일이후 민주시민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초기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행해져야 하지만 특히 통일로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할 대상은 북한주민으로 이들을 염두에 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했다. 통일이후 북한주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은 북한주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등에 기초하고 있는 통일한국에 동화되고 남북한 주민의 내적통합 등을 달성하는데 중점을 둔 교육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통일직후 북한주민 대상 민주시민교육은 북한주민이 통일한국사회에 동화에 이어 남북한주민간의 연대의식을 통해 내적 통합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행해져야 한다.

북한주민이 통일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 적응과 부적응 등의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칠 것이므로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과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통일직후 북한주민이 통일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동화되기 이전 과도기 단계에서 초기 적응의 시행착오과정을 거쳐 안정단계에 접어드는 세부단계를 구분하여 그에 요구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통일직후 북한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의 정치교육의 사례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사례 등을 고려하여 이를 기초로 교육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내용과 방법 등을 고안하고자 했다. 독일의 사례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준 사실은 새로운 환경에 동화되어 내적 통합을 달성하는데 있어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직후 북한주민대상 민주시민교육에는 통일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함양만이 아닌 자립자활의 능력배양과 심리 및 정서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통일직후 북한주민이 통일한국사회에 동화되어 남북한 주민 간 연대감을 통해 사회통합을 원활하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만이 아닌 남한 주민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통일과 사회통합달성에는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와 공존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 등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주민이 통일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착되는 데는 남한주민들의 포용, 배려 등도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에 앞서 남북한 주민 간 상호이해 교육을 포함한 민주시

민교육이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행해져야 한다. 또한 통일에 앞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집단별 맞춤형의 표준교육안을 설계하여 통일이후 북한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통일이후 구동독지역에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기반시설이 비교적 조기에 달성되어 교육이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은 통일이전부터 민주시민교육의 경험-조직, 인력, 시설 등이 중요 역할을 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통일에 앞서 통일준비 차원의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민주시민육성과 민주시민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내용과 방식 그리고 이를 일관되게 시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 이행돼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영국, “통일독일의 정치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연구』 6권, 1997.
-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2014~2016.
-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및 사회통합조사’ 2014~2016.
- 박명규 외, 『남북통합지수2008-2013』 변동과 함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13.
-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의 『북한주민통일의식』 2008~2017.
- 오수웅, “통일단계별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개발과 활용방안: 루소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선거연수원 ‘제 11회 민주시민교육국제시포지엄’ 발표문, 2015. 9
- 오일환, “통일을 전후한 독일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9집2호, 1995.
- 이규영,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국제지역연구』 9권 3호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005.
- 이종희 “통일 후 동독지역의 민주시민교육 :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토론문.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자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6.
- 정기섭, ‘독일 민주시민교육방법론 사례분석’, 선거연수원, 제 12회 『민주시민교육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6.
- 정영수, ‘통일후 독일교육의 변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제 14권 2호, 1992
- 최영돈, “독일의 정치교육과 관점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토론문.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자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6.
- 통일부, 『독일 통일 통합정책연구』, “1989~2009년까지 20년간의 평화로운 혁명, 신연방주 주민들의 시각 2009년 7월 20일”, 2011.
- 통일원, 『독일 통일백서』, 1994.
- 한국교육개발원,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1-09
- 황병덕, 『독일의 정치교육』 민족통일연구원, 1995.
- Cogan, J. J., Citizenship for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education. Kogan Page, 2000.
- Kymlicka, Will. Education for Citizenship. James Arthur and Ian Davies(ed.). Citizenship Education Vol 1. Sage Library, 2008.
- Dr.Martina Weyrauch, “독일 통일과 민주시민교육”, 선거연수원 국제심포지엄‘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제도화’, 발표문, 2005
- Thomas Kruger, “동독정치교육의 특이점”, 제 6차 한독자문위원회 2016.5.
- Josephine Evans, “통일 후 동독지역의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선거연수원, 제 12회 『민주시민교육국제심포지엄자료집』 2016.